

미래의 생명공간 금강하구, 생태복원 추진방안은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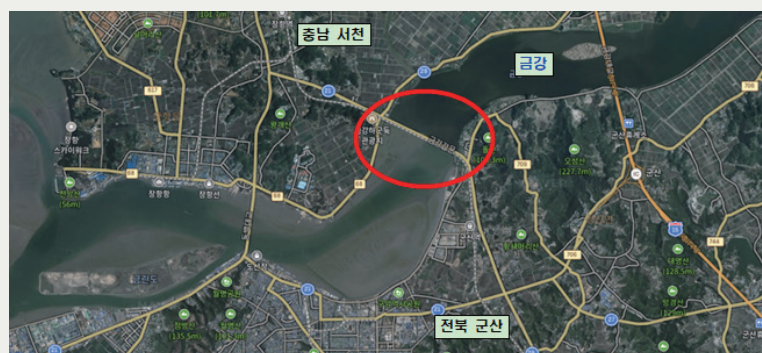
충남연구원

김영일 전임연구위원
이상진 수석연구위원

1. 선정 배경

1) 금강하굿둑 건설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 발생

- 금강하굿둑 조성 이후 수질오염에 따른 수질·수생태계 악화, 하굿둑 내·외측 퇴적토 축적, 어류 이동 단절로 인한 어족자원 고갈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
- 특히, 지난 2021년 금강 하류 및 하구지역에 녹조 발생으로 인해 남조류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금강용수로 농사를 지은 쌀에서도 검출되면서 지역적인 이슈로 대두



2) 금강하구 해수순환을 통한 생태복원에 대한 인식 차이 및 갈등 지속

- 금강하구의 해수순환에 대한 이해관계자 간 다각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나, 지자체 간, 농업인 및 어업인 간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이 존재함
 - 충청남도는 수질개선을 위해 용수이용 대안을 확보하여 해수순환을 추진하자는 입장인 반면, 전라북도는 해수 유입 시 염분 확산에 따른 농업 및 공업용수 사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용수확보 선행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
 - 금강하구 해수순환에 대해 농업인은 농업용수 부족을 우려하는 반면, 어업인은 경제성 여종 회복 기대

3) 금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필요

- 금강하구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및 이해관계자 간 입장차이가 존재하지만, 충청남도는 해수순환을 통한 퇴적물 문제해결과 수질개선 및 생태회복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음
- 최근 낙동강 하굿둑 해수유통 실증실험 이후 상시 개방으로 인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구복원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임
- 금강호 물 이용 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금강하구 해수순환을 통한 생태복원 추진방안 마련이 필요함

2. 추진 현황

1)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현황

- 2009년 이후부터 충청남도는 금강하구 생태복원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
 - 금강하굿둑 구조개선(배수갑문 증설) 및 어도 추가설치 요구,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 건의, 충남도의회 '금강특위' 구성(현장 방문, 토론회 개최) 등 다양한 활동 추진
- 2019년 해양수산부 연구용역인 “금강하구역 종합관리시스템 개발 연구” 결과에서 금강하구 해수유통 시나리오 제안
 - 해수유통 효과 및 양수시설 이전 비용 등 종합검토 결과, 염분 침투범위가 10km일 때 배수갑문을 20~30cm 개방하는 것을 최적의 대안으로 제안
- 2021년 9월 충남도의회가 금강하구호 생태복원을 위해 ‘금강하구 해수유통 20대 대선공약 및 국정과제 채택 촉구 건의안’ 채택
- 2022년 1월 충남과 전북, 대전, 세종, 충북 등 시·민·사회단체가 함께하는 “금강하구 자연성회복 추진위원회” 발족
 - 금강하구 해수유통과 생태계 복원, 금강하구 농·공용수 취수원 이전 등 공급대안 마련, 하구복원 특별법 제정, 예산확보와 수산업 복원 노력, 금강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, 금강하구 상생발전 방안 마련 등 7개 과제를 마련
- 2022년 2월 전국 317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“4대강 국가하구 생태복원 국정과제 채택 전국회의” 출범
- “금강하구 생태복원”이 민선8기 충청남도 도정과제에 포함

- 낙동강 하굿둑 해수유통 실증실험을 통해 본격적인 개방에 따라 충청남도는 금강하구 해수유통을 통한 생태복원방안 마련을 위해 환경부에 해수유통 실증실험 타당성 검토 연구를 추진하도록 지속적으로 요청



2) 충남연구원 연구 및 현장 활동

- 2015년 충남연구원 현안과제로 “하구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안) 작성 연구”를 수행하여 2017년 ‘연안하구 복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’ 제정을 위한 초석 마련
- 2017년 “금강하구 생태복원 세미나” 개최를 통해 금강하구의 현황 점검과 생태복원 추진 방향 마련
- 2019년 충남연구원 전략과제로 ‘금강하구역 정책 현황과 추진과제’ 수행
- 2021년 충남도의회 금강특위 토론회 참석
- 2022년 충청남도에 구성되어 있는 ‘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 TF팀’을 대상으로 “금강하구 생태복원 정책방향 및 추진과제”를 주제로 발표
- 2011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수탁과제 “금강 물환경 모니터링 연구용역”의 연구범위를 2021년부터 금강 중·하류 3개 보 중심에서 금강하구까지 확대하여 연구를 추진 중
 - 금강하구 생태복원 타당성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금강하구 지역의 수질, 수생태, 퇴적물 오염도, 하상변화, 수자원 이용, 지하수위 변화 등 물환경 전반에 대해 모니터링 추진



3. 정책 과제

1) 금강하구 생태복원 실행력 담보를 위한 통합적, 체계적, 다층적 추진

- 금강유역 여건변화를 고려한 통합적 시각에서 금강하구 복원을 추진하여야 함
 - 금강하구를 중심으로 유역 전체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농업 및 공업용수 이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필요
- 금강하구 생태복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함
 - 금강하구 해수순환을 통한 생태복원 중장기 로드맵 수립이 필요하며, 다양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추진
- 금강하구 복원을 위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다층적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 이들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함
 - 중앙 및 지방정부(하구복원 정책 추진), 국회 및 지방의회(법률 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), 전문가(연구 수행),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(의견수렴 및 공론화) 등 역할 부여

2) 금강하구 생태복원 이슈의 공론화를 통한 공동 협력방안 모색

- 중앙정부와 전북지역의 하구복원에 대한 입장 변화를 유도하여야 함
 - 충남도, 충남도의회, 전문가, 시민단체 등과 협력을 통해 금강하구 문제를 적극적으로 공론화 하여 공동 협력방안 마련
 - 해수순환을 통한 금강하구 생태복원방안에 대해 중앙정부(특히, 농림축산식품부) 및 전북지역(전북도 및 군산시)의 공감대 형성

3) 금강하구 해수순환을 위한 금강 배수갑문 개방 실증사업 추진

- 금강하굿둑 배수갑문 부분 개방을 통해 해수순환 및 기수역을 조성하고, 취·양수장 상류 이설사업을 감안하여 세심하게 추진하여야 함
 - 금강 배수갑문 개방 실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환경부 차원에서 해수유통 실증실험 타당성 검토 연구를 사전에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요청
- 금강하구 개방 실증실험을 위한 민·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필요함
 - 환경부, 해양수산부, 농림축산식품부, 충남도(서천군), 전북도(군산시), K-water, 한국농어촌공사, 전문가, 농어민,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·관협의체를 구성하여 금강 배수갑문 개방 실증사업 추진 필요

CNI정책현장은 충남도 및 15개 시군의 정책연구와 관련된 현장 중심의 문제 발굴 및 대응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제작하는 시의성을 중심으로 한 월간 브리프임